

# 이 대통령, ‘3대 특별검사’ 전격 임명

‘내란 특검’ 조은석 · ‘김건희 특검’ 민중기 · ‘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르면 내달 초부터 본격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3대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윤석열 내란 의혹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채해병 특검)을 각각 임명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고,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는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 부장이다.

이는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지 불과 8시간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과거 진행되던 특검 임명보다 매우 빠른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혹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이 대통령은 논란이 확대되기 전 신속하게 국면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정부부터 이재명 지지층

사이에서 특검 요구가 높았던 만큼,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내부 결속과 민심 회복을 동시에 노린 행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시절 주요 인사였던 전성배 씨(건진 법사)를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문건 관련 군 수뇌부 15명을 군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번 특검은 각각 60명, 40명, 20명 규모의 검사 인력을 파견받아 최대 120명 수준으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적인 특검 임명 속도는 새 정부의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향한 강한 메시지로 해석되며 취임 초기에 추진 동력을 갖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민생경제에 매진하려는 모습으로 읽힌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된 뒤 기뻐하고 있다.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정보통’ 김병기 의원

“국가 재건에 모든 걸 바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정보통’ 출신의 3선 김병기 의원(서울 영등포구)이 지난 13일 선출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4선의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을 제치고 과반 득표를 얻어 제2기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원내대표 선출은 국회의원 80% 권리당원 20% 반영방식으로 선출됐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를 원내대표로 선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 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삼아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대표적 천문 인

사였지만, 202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친명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1대 대선 당시 선대위 ‘현안 대응 TF’ 단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선 당 공천관리위 간사로 활동하며 당내 친명 체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다. 최근 대선에선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아 전략 실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 시절 흔들렸던 국정운영 기조를 안정적으로 되돌리고, 집권여당으로서의 무게에 걸맞은 입법 전략과 정책 조율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국정원 개혁 △민생 회복 △균형발전 △국민통합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입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도 막중하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간 근무한 이력으로 ‘정보기관 출신 최초의 원내대표’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특유의 정부 감각과 조직 장악력이 향후 여당의 원내 전략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만호 기자

## 신기술 악용한 신종 테러 대응한다

민주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3일,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불법 유통과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방지법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해, 기존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3D프린팅



기반 총기의 제작·유통·위험성 조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의원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처럼 3D프린팅 총기가 실제 테러에 이용된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법은 이를 규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신기술 악용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테러 위험성 조사, 관련 업체의 위험 교육 참여, 신기술 무기 분석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 도의회 상임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중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별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심사서 회계운영 및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향후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생명축산산업국, 환경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서 농업과 축산이 하나의 조직에 통합돼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 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모사업 대응 시 도

의회와의 협의와 도의원 역할 강화, 농업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심사서 “도내 시군에 교부된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이 남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어느 시군에서 시군비 매칭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지, 또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반납이 발생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제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관 심사서 전북교육청이 660억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농작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시 농업인 소득감소분 보전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2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사된 작물을 재배하러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 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현장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적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일부 불이익 조치를 삭제·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직불금 감액 시행을 차년도로 미루는 등 폐널티성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완주·전주 통합 여론조사 ‘부적절’”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대선 사전투표일에 강행

결과 은폐는 의정활동 방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과 권요안 의원이 전북자치도의 전주·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강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여론조사 결과 자료 제출 거부를 규탄했다.

두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여론조사가 도민의 혈세로 부적절하게 실시되었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전주와 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자치행정과에서 완주 군민만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라는 엄청난 시기에 완주 군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김관영 지사와 행정 공무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요안 의원 또한 “투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ARS도 아닌 전화면접 방식으로 1분 이상 지속적으로 완주 군민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반을 물었다”며, “명백하게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여론조사가 완주 군민의 의사를 파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과 권요안 의원이 지난 1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완주·전주 통합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고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북자치도는 측은 상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은폐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의원들이 당연히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현재 전문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며, 정보공개법을 떠나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해당된다는 법령을 근거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도민의 혈세

가 투입된 것인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윤수봉 의원은 주장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5건의 여론조사가 모두 ‘모노 리서치’ 한 곳에서만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수봉 의원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데, 한 기관에만 다섯 번을 맡긴 것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방식보다 비용이 더 드는 전화 면접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438만원의 비용이 지불된 점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봉·권요안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자치도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명백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